

설 연휴 보낸李 대통령, ‘속도·체감’ 중점 민생 드라이브

집권 2년 차 ‘국민 체감 성과’ 총력 SNS 통해 다주택 투기 근절 언급 가격 적정성 검토 등 물가 관리도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 의 무거운 부동산·물가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돌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면서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 주재한 참모 회의에서 ‘속도’와 ‘체감’을 강조한 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있다. 올해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데다, 6·3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집값·물가 등 민생경제 대응에 속도를 높여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

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시절 이 대통령이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이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무적인 수사보다는 민생 정책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로

도 볼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문제 해결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문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의제를 SNS를 통해 직접 대응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SNS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지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길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진 권한을 활용해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를 해소, 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아야 한다고 먼저 언급했고, 정부는 유예 중단 방침을 발표할 바 있다. 또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 등 금융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문제’라는 메시지도 SNS로 먼저 제시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SNS 상으로 선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물가 관리’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명절 밥상 물가 뿐 아니라 생리대·교복 등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품목을 일일이 언급하며 가격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관세 인하 혜택을 악용하는 유통 업체에는 ‘세금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며 회의 석상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대전·충남 통합 안된다는 野… 與 단독처리

국힘, 절차적 정당성 등 이유로 반대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은 합의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6·3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지방선거 전 통합을 이룰 방침이지만, 대전·충남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 지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지난 12일 밤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처리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연휴 직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직접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언급한 지 두 달 만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하면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특히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지원, 대구·경북에는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대전·충남 특별법엔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임주기업 특례 등도 담겼다.

당정은 이달 내 통합 특별법을 통과

시킬 방침이다. 그렇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이전 통합은 불가능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지역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대전·충남은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 이양,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의제는 국민의힘이 먼저 띄웠지만, 정부여당 안을 두고 ‘껌데기 통합안’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전·충



윤건영(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와 서범수(오른쪽)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쟁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가운데는 신정훈 위원장.

/뉴시스

남 통합 반대 움직임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강 실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 모두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간 상태다.

민주당은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율 배반적 행태”라며 통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초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제안했다. 발의한 법안에도 장동혁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주민을 방패삼아 반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는 선거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다. 국민의힘의 어리석고 한심한 정치공학에 동의할 생각 없다”며 “우선 현재 정리된 안을 처리한 이후에 입법과제를 새롭게 해서 부족한 부분 새로 입법을 하든지 채워야 한다. 이것이 훨씬 합리적이다”고 공언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이달 본회의 처리 목표

한병도 원내대표 “24일 본회의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개혁 분야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 개의를 원위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실질적 국정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이 많다”며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

통합 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 예외 조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3차 상법 개정에서 쟁점은 예외 조항

이다. 국민의힘은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보장해 달라는 재계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톨(도구)”이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맞섰다.

/서예진 기자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군·경찰 지휘부 7명 함께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앞선 전 정부 국무위원 재판에서 ‘위헌·위법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 내란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쿠원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인

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지호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이 출동한 것도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봤다.

/서예진 기자